정부 예산 12.8% 늘었는데…농림수산은 뒷걸음

관계기관 증가율 전체 예산 증가율 하회

R&D·산불·어업재해 등 대응 예산도 부족

농식품부 비중 2.7%로 전년比 0.1%p ↓

서삼석 "식량안보 차원 재정 확충 등 필요"

2027년 농림수산 관계기관 예산이 전년보다 늘었지만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오히려 줄었다.

농업·산림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역시 과거 최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산불과 어업재해 등 재해 대응 예산도 일부 감액돼 식량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7년 농림수산 관계기관 예산 증가율은 정부 전체 예산안 증가율인 12.8%를 모두 밑돌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예산은 22조2천215억원으로 전년 20조1천362억원보다 2조853억원(10.4%) 늘었다. 하지만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전년보다 0.1%p 하락했다.

기관별 예산 증가율도 ▲농식품부 10.4% ▲해양수산부 8.9% ▲해양경찰청 6.7% ▲농촌진흥청 6.5% ▲산림청 4.4%에 그쳐 모두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해 대응 예산의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해수부의 어업재해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약 12% 줄었고, 산림청의 산불 대응 예산은 17.6%, 해양경찰청의 구조 관련 예산은 7.1% 각각 감소했다.

농업·산림 분야 R&D 투자도 충분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의 R&D 예산은 2022년 2천902억원, 농진청은 2023년 9천22억원으로 각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7년 예산안 기준으로 과거 최대 수준에 도달하려면 농식품부는 162억원, 농진청은 1천21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관 전체 예산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졌다. 농식품부는 2026년 0.4%에서 2027년 0.3%로, 농진청은 67.9%에서 65.9%로, 산림청은 5.5%에서 5.4%로 각각 하락했다.

산불 진화전력 확보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산림청이 오는 30일 납품받을 예정이었던 시누크 헬기 2호기는 제작사가 납품 목표 시점을 2027년 6월로 제시하면서 도입이 지연될 전망이다. 감항증명 신청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수화상병 예방·방제 예산 역시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진청은 2027년부터 공적방제 손실보상금과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제거 사업을 통합하면서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40.2% 줄인 104억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전염원 사전제거 면적은 2025년 71.2ha에서 2026년 91.7ha로 늘었고, 대상 농가도 86곳에서 112곳으로 증가했다. 사전제거 사업의 예산 집행률도 99.2%에 달하는 만큼 예방·방제 수요와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구분해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농림수산 관계기관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정부 전체 재정 확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국가 예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며 "농업·산림 R&D 투자마저 과거 최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은 식량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림수산 분야가 차지하는 재정 비중을 확대하고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R&D 예산을 과거 최대 수준 이상으로 회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핵심 농업기술 개발과 연구성과의 현장 보급을 강화하는 한편 농어업인 소득 안정과 재해 예방·대응에 필요한 예산도 적극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진숙,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위원 선임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북구을)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증액·감액을 최종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을 최종 조정하는 핵심 기구다.

전 의원은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정부의 국정과제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민생 회복과 복지 강화는 물론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예산 확보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남광주를 대표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5조원 규모의 통합재정지원금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 재원으로 이어지도록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전 의원은 "820조원이 넘는 국가 예산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발전 5사 통합…국가 차원 '에너지 주권' 기반 마련

국회서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 토론회'

신정훈, 재생에너지 데이터 축적 등 제안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이 5일 발전공기업 5사 통합을 계기로 신설 통합발전공사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자원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주권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법 구상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공공성 확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1990년대 후반 전력산업 구조 개편으로 발전 5개사 체제가 자리 잡았지만 20여년 동안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했고,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새로운 과제에도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책임 있게 수행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달 16일 발전 5사의 통합과 기존 직원·자산 승계, 재생에너지전환본부 설치, 통합 본사의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설치 등을 담은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입법 구상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자원을 공공이 주도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축적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전환을 위한 장치도 법안에 담았다.

기존 발전공기업 직원의 근속연수를 통합공사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출범 초기 노동이사 선임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고, 사업 위탁 범위도 지방공사와 공단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국가공기업과 지방 공공기관의 협력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일하는 사람 모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지키고 석탄발전 지역의 새로운 미래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도심 흉물 전락한 광주폴리 정비해야"

홍기월, 행감서 관리 부실 지적

금남로 등 3곳 철거 검토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은 지난 4일 관리 부실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광주폴리 일부 시설에 대한 철거와 정비를 촉구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문화도시예술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도록 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흉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금남로 근린공원의 '유동성 조절', 충장파출소 일대 '99칸', 중앙초등학교 사거리 일대 '광주사람들' 등 3곳을 지목하며 철거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금남로 근린공원은 폴리 구조물이 공원의 개방감을 저해하고 있으며 '99칸'은 주민과 상인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돼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예술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치하기보다 주변 환경과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철거가 필요한 시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창모 문화도시예술본부장은 "그동안 최소한의 예산으로 폴리를 관리하면서 사실상 방치된 작품이 많았다"며 "작가와의 협의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